

동경전력과 일본의 전력제도 개혁(1)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를 계기로 개혁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동경전력의 경영개혁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화력발전 부문의 분리 매각하고, 사내분사화 등 경영형태 변경과 함께, 공적관리 3년 후 흑자로 전환, 5년 후에는 중단되어 있던 사채발행 재개 등이 개혁안의 골자임.

□ 동경전력, 화력발전을 분리

- 동경전력과 일본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화력발전 부문의 분리·매각을 축으로 한 개혁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감.
- 동경전력 발전능력의 약 60%를 점하는 화력발전 부문에 외부자금을 도입,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 것임. 남은 원자력 등의 발전 및 송배전, 판매 등의 각 부문은 경영투명화를 위해 사내분사화에 의한 독립적인 운영안이 유력.
- 지금까지 발·송전의 일체적 운영을 일부 개선할 경우 전력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정부가 출자하는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와 동경전력은 원전사고 후 동경전력의 경영개혁을 위해 3월에 「종합특별사업계획」을 수립. 경영형태의 개혁은 자본투입 및 경영체제 쇄신 등과 맞먹는 개혁의 기동으로서 전력회사의 자기부담주의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도 모름.

- 화력발전 설비는 약4천만 kw(2010년 시점), 자산규모는 약 9천억 엔. 발전소별로 본체에서 분리하여 타사의 출자를 받아들이는 안으로, 발전소의 대부분을 분리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발전소에 따라서는 외부에 완전 매각할 가능성도 있으나, 실시 시기는 당면한 전력부족난이 해소되는 시점을 예상하고 있음.
- 실현될 경우 분리된 화력발전소는 동경전력에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에 판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관할지역내에서 동경전력과 독립된 사업자와의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 동경전력은 원전 정지로 화력발전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나, 배상이나 폐로의 부담을 안으면서 신규 설비로 대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화력부문을 분리하게 되면 타사와의 공동 발전소 운영 및 외부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됨.
- 이외에 화력발전의 주된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을 다른 전력·가스회사와 공동 조달하는 것도 목표로 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 사내분사화

- 동경전력 본체에 남는 원자력이나 수력 등의 발전, 송·배전망 운영의 네트워크, 대고객 영업 등 판매 각 부문은 사내 분사(company)로 이전, 독립적인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
- 특히 네트워크 부문은 독립된 사업자로부터 송배전을 수탁 받는 역할을 갖게 되기 때문에, 타부문과의 정보차단 등을 강화하여 중립성을 높이고, 원전 사고의 배상이나 폐로는 계속해서 동경전력에서 담당

- 3월에 동경전력과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서는 동경전력에 대한 자본투입으로 일본정부가 2/3이상 의결권을 취득하는 것도 시야에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
- 사외이사가 중심인 「위원회설치회사」로 이행, 현재 17명의 이사들을 대폭 줄이고 회장도 외부에서 초빙하는 방향으로 조정.

□ 동경전력, 3년 후 흑자화, 5년 후 사채발행 재개

- 동경전력의 공적관리를 위해,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가 시산한 동경전력의 10년간 자금계획에 의하면, 2013년 3월 1조 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관리에 들어감. 3년 후인 2015년 3월 결산기에 경상손익을 흑자로 전환, 2017년 3월에는 사채발행을 재개
-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전제로,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와 공동으로 3월말까지 종합특별사업계획서를 완료해야 함.
- 동경전력은 폐로비용 부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활한 배상이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경전력의 일시적인 공적관리를 검토하고 있음.

□ 자금계획 : 공적관리 이후 동경전력의 재정 시나리오

- 자금계획은 공적 관리 이후 동경전력의 종합계획의 골격으로 재정 상태에 관한 시나리오를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가 시산하여 거래 금융기관에 제시기로 되어 있음.

- 동경전력이 금년 주주총회에서 주식수권한도를 확대한 후,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가 2013년 3월에 1조 엔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거래 금융기관은 금년 6월에 1조 엔을 추가 융자하여 합계 2조 엔의 자금지원이 계획의 골자임.
- 계획에 의하면, 동경전력의 단독 최종 손익은 2012년 3월, 2013년 3월 모두 5,800억엔 전후의 적자를 낼 전망. 그러나 2014년 3월에는 부동산매각 등으로 377억엔의 순이익을 계상하게 될 전망이며, 2015년 3월에는 경상손익도 1,591억엔의 흑자를 예상됨.
- 배상에 대한 공적자금지원금 상환은 2014년 3월부터 시작, 세액공제전 이익의 50%를 충당. 이것과는 별도로 동경전력의 전력회사와 함께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에 상환하는 일반부담금은 연간 500억 엔으로 상정. 전력업계 전체 부담은 1,500억 엔 규모에 이를 전망.
- 동경전력의 자기자본비율은 공적관리 3년 이후 10%를 초과하게 되며, 공적관리 5년 후에는 원전사고 이후 정지되고 있는 사채발행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자력으로 자금조달 목표를 설정, 공적관리를 6~7년 내에 마친다는 계획도 시야에 넣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수익개선의 전제는 전기요금 인상과 정기검사로 정지된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원전의 재가동에 의한 연료부담의 경감이며, 자금계획에서는 금년 10월부터 전기요금을 10%인상, 가리와자키가리와 원전은 2013년도부터 재가동을 상정하고 있음.

□ 예상되는 문제점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여론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은 10%을 하회할 공산이 크나, 인상허가권을 가진 경산대신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 원전재개동 등을 받아 3년 정도 후에 다시 인하하는 방안도 예상되나 원전의 재가동은 지방자치체의 동의를 포함, 목표가 서있지 않음.
- 게다가 동경전력은 국가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자본투입을 받아들일 방침을 굳히고 있지 않음. 종합계획서에서는 동경전력의 화력발전소를 개별적으로 매각·분리하는 등 경영개혁의 방향성도 제시할 방향이나 정부를 포함, 관계자들 간의 조정에 난항이 예상됨.

(2편으로 계속 이어짐)

<참고자료>

일본경제신문 2012.1.23~1.27